21대 마지막 국감 개막…상임위마다 쟁점 산적 '野심만만'

내달 8일까지 24일 일정…文·尹정부 실정론 격돌 예고
양평고속도로·日오염수 등 공방…광주·전남 13일 시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지만 여야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어 '맹탕 국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으며, 극심한 대치 정국 속에서 '체계적인 국정 감시'라는 국감의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광주·전남권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 올해 국정감사(국감) 일정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감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며, 올해로 활동을 종료하는 5·18조사위의 성과, 조사 진척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데,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나주에서 주로 열렸던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19일 국회에서 치러진다. 이밖에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17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국감이 전북대에서 이어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국회에서 받는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은 19일 국회에서 각각 진행된다.

20일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9)에서 받는다. 24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대전에서 열린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행정력과 치안력을 집중하도록 내년으로 미뤄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7.7%…1.7%P 올라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59.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오른 37.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3%p 내린 59.8%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4%p↑)과 서울(7.0%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7.4%p↓), 대전·세종·충청(4.0%p↓)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20대(6.9%p↑)와 60대(3.4%p↑), 50대(1.2%p↑)에서 오르고, 70대 이상(1.7%p)에선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0%p↑)에서 오르고, 중도층(1.9%p↓), 진보층(0.7%p↓)에선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대법원장·헌재소장 후임 인선 고심

유남석 헌재소장 다음달 퇴임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서 한 치 앞도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할 것"이라며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으로 인해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고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며 "국민을 인질로 잡은 정쟁에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하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선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들어온 데 따른 반전 없는 결과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수사 뇌물 혐의로 확대

'고교 인맥' 역할 추적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에서 뇌물 혐의로 확대되면서, 그의 '고교 인맥'도 의혹의 새로운 고리로 주목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압수한 송 전 대표와 전직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김모(61)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김씨는 그간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의심하며 수사해 온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외곽 조직 후원금 의혹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75)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21년 7~8월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런 구도 속에서 당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었던 김씨의 역할에 주목한다. 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이 김씨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됐으리라는 것이다.

김씨는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부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 출신이다. 2019년 국토부 산하기관장을 지낸 뒤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